

장애인 자립·돌봄 지원 더 촘촘해진다

전주시, 자립지원 시범사업 확대·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 등 추진

전주시가 2025년 새해를 맞아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안착시키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대상을 기존 28명에서 40명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과 시설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자립 희망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 목표로 총 27호의 자립주택을 확보했으며, 일자리 연계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각종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해 현재 총 32명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시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필요도에 따라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유형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전문인력을 통해 일대일로 제공한다.

시는 이러한 시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포용적인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지난 2023년 시범사업 지자체 중 최초로 우수 지자체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됐다.

/김욱기 기자

필수 의료 인력 확보 기여 공로

전북대병원 허권희 연구지원실장, 지역 공공성 역할 강화 등 기여...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전북대학교 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연구지원실 허권희 실장이 교육인재개발팀 장으로서 필수 의료 인력 확보와 교육 인프라 고도화 및 지역 공공성 역할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허권희 연구지원실장은 2021년 8월 12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교육인재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며 공공임상교수 및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의 기틀을 마련 및 전공의 파견수련 모자병원 확대 운영 등 필수 의료 인력 확보와 교육 인프라 고도화 및 지역 공공성 역할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허권희 연구지원실장이 교

육인재개발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는 전공의 인력의 수련 진료과 선택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치우쳐 있었고, 의·정장들을 맞이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돼 해당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변 여건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뤄낸 성과이다.

허 실장은 공공임상교수 제도 등을 통해 필수 의료 인재를 확보하고 우수 인재 육성에 기여했으며, 임상교육훈련센터 유치 및 임상실습 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교육 훈련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내·외부 고객 만족도를 제고시켰다.

또한 전공의 파견수련 모자병원을 확대 운영하며 권역 책임 의료 시범사업의 기틀을 마련 및 전공의 파견수련 모자병원 확대 운영 등 필수 의료 인력 확보와 교육 인프라 고도화 및 지역 공공성 역할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허권희 연구지원실장이 교

/김욱기 기자

전주시, 수소시내버스 특별 안심 점검으로 안전성 확보

'시민 안전 최우선' 주요 부품·시스템 진단 실시

전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2일 동안 전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수소시내버스 147대에 대한 특별 안심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지역에서 발생한 수소 충전 중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했다.

시는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직후 수소 시내버스 제작사인 현대자동차 전주하이테크센터와 대책 회의를 갖고, 전문 점검반(4개조 8명)을 편성해 각 회차지와 5개 운수업체 차고지를 방문해 전국 최초로 수소시내버스의 주요 부품과 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진행했다.

특히 점검반은 수소연료 공급라인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연료공급라인을 잇는 연결 볼트가 수소버스 토크(조임 강도) 기준에서 아주 미세하게 풀려 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에 점검반은 이러한 미세 누기가 발견된 17대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수소전기버스에는 총 37개의 전기제어유닛이 설치돼 있으며 그중 1개의 메인 유닛이 36개의 유닛을 통제하는데 이러한 유닛간 접촉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단순 사항이 발견된 3대의 버스에 대한 조치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수소시내버스 대중교통 운영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합동으로 수소시내버스 차량 안전을 위해 점검 주기와 점검 방법 등에 관한 정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내버스 운영 주체인 운수회사의 정비 인력의 수소버스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해 운수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자동차 제작사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시 수소시내버스 안전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전주시·운수사·제작사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타지역 수소시내버스 폭발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원인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



전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2일 동안 전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수소시내버스 147대에 대한 특별 안심 점검을 실시했다.

전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수소시내버스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수송 수단의 탄소중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소시내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출향·전입 청년 채용기업·청년에 장려금 지원

전주시, 28일까지 공개 모집

전주시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도 출향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올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주지역 기업으로서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중 매월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모집한 후, 이들 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했던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출향)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전입)

중 채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신고가 가능한 청년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또, 채용예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 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동안 전주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자격요건을 갖춰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매월 100만 원씩 최대 1년간 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근속 시 최대 9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청년정책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8층)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이 찾아오는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내 흉만 본다" 남편에게 살충제 섞어 먹이려 한 아내, 1심 징역

자신의 혐담을 한다고 생각해 남편이 자주 쓰던 식료품에 살충제를 넣은 60대가 징역형의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징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임실군의 자

택에서 남편인 피해자 B(66)씨가 자주 먹던 들기름과 알약에 살충제를 넣어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B씨에 대해 “평소 일은 하지 않고 취미인 판소리를 한다며 밖으로만 나가고 밖에서 내 흉만 보고 다녔다”고 진술하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인 B씨는 아내인 A씨가 B씨의 지인에게 “죽여버리겠다” “판소리 소리만 나오면 (B씨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부부 사이 관계가 나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B씨가 평소 자주 먹던 들기름과 알약 용기에 살충제를 소량 넣었다. B씨는 살충제가 담긴 들기름을 밥에 비벼 먹으려다 이상한 냄새를 맡은 뒤 즉시 뱉어 큰 사고는 일어

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행위가 위험하고 그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압박을 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투입된 살충제가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담한 대우에 일부 노출돼 범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